만사형통충남 3차 도민제안 검토 의견서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1	**지하철 1호선과 천안 아산 버스 노선간 환승** 천안 아산 지역에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지만 환승이 않됨.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승가능. **서울, 경기도와 충남 간 환승제도 정비 필요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수도권 지하철 환승은 한국철도공사,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와 협의 필요 - '17. 4.부터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관련 시·도는 부동의 표명	
2	**충남 도내 버스터미널과 역에 도정 전용 홍보 모니터(PC)+전광판 설치** 충남 도내 교통 약자는 터미널과 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. 교통 약자가 정보 약자가 될 가능성이 큼. **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충남도의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. 이를 위해 도정 홍보 모니터 확보 필요**	공동체정책관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천안, 홍성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터미널이 소규모로 인해 유동인구가 적고, 컨텐츠 송출을 위한 독자적 망 구축은 최적모델 도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고비용이 소요되어 투자대비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됨 - 이에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영상관보(도정 홍보 영상 컨텐츠)를 제작하여 홈페이지, 유튜브 및 케이블방송사(중부 티브로드, 충남 CJ헬로비전, CMB충청방송)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정 홍보 추진중	
3	**대중교통 문제 해결** 지역 접근성이 좋은 대중교통 인프라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현재 충남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와 버스를 이용한 도시형·농촌형 교통모델을 추진 중에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구축이 안되어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저해. 따라서 **중앙 교통으로 철도, 대중교통(육상) 등 접근성이 용이토록 태안, 서산, 당진까지 고속도로, 철도 연장하고, 지역에서는 각 마을까지 (간선) 대중교통 연장으로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**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.			
4	**대중교통(버스) 승강장별 정차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 도입**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을 다니는데 버스배차시간이 버스 출발점과 종점 시간만 표시가 되어 있어 중간 승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많은 불편이 있음. 요즘 핸드폰으로 버스 운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가 조작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음. 따라서, **버스 승강장에 버스 정차 시간 및 대기시간(현재 운행 위치)을 알 수 있는 모니터(현재 운영 중인 곳도 있으나 정체 시 기간 오차 심함) 설치 확대**로 대기 불편 최소화	교통정책과	○ **채택**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기시행 - 현재 충남에서는 앱 으로 버스정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향후, 도민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5	**버스 정류장 정보시스템 정비** **어르신 및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스 정류장 정보 시스템 정비 필요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현재 국비 사업으로 BIS(버스정보 시스템)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	
6	**마을 교통 시설 및 서비스 정비** **시골 버스 정류장 시간표 안내판 정비 필요.** 비표준화 되어 있는 현재의 시간표(종이 한장 꽂아 놓은 시간표)는 시골 주민들의 소외감(도시민들과 괴리감으로 인한)마저 불러일으킴. 오히려 **고령화 되는 시골의 현실을 반영한 시각화(노인들의 시력 저하 등 문제 해결) 및 음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비 필요**	교통정책과	○ **채택**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기시행 - 도민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겠음	
7	**현재 비효율적인 내포 시외·고속버스 정류장 변경 제안** **내포에 있는 고속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위해 시외버스**가 비효율적인 노선을 이용하고 있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우회하지 말고 최단거리로 도착하도록 변경**해야함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정류소 변경 시 5~10분 운행시간 절감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도서관 앞으로 정류소를 이전하고 승강장(대기실, 버스정차대 등)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및 토지수용이 필요한 사항임 - 또한 기존 매표소에서 매표 후 충남도서관 승강장으로 이동할 경우 도보 5분정도 소요가 되어 추가적인 민원발생 요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8	**도와 시군간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** 도청이 있는 **내포와 타시군간** 대중교통이 불편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대중교통을 확충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내포와 타시군간 정기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지원**하는 정책 마련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현재 내포신도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서울, 인천, 대전, 천안, 아산, 예산, 서산, 태안, 보령, 홍성 등이 기 운행중에 있으며, 정기 운행 노선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충분한 수송수요, 승무원 보충, 운수사업자간 운행 합의 등 검토가 필요하나, -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52시간제 시행으로 승무원 부족 및 매년 비수익노선 증가로 도 재정지원으로 한계가 있어 노선단축 또는 감회하는 실정이므로 - 향후 여건개선이 이루어지고 승무원 확보 및 수송수요 등 증가요인에 따라 노선신설 검토토록 하겠음	
9	**안전유도블록 설치 확대** **횡단보도에서조차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음**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2017년도부터 1년간 아파트 밀집지대(상가가 일찍 문 닫는 지역)의 **횡단보도에 '스마트안전유도블록'을 설치 운영**하고 있음. 충남도에서 인구가 밀집돼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도에서는 경찰청, 교육청, 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 등 8개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사고 저감 방안 등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안전실무협의회 논의를 하고 있으며, 시·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 - 다만,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, 제안 내용에 대해 교통안전실무협의회 논의·검토 후 사업효과 및 시급성을 감안, 시점 설치 및 확대운영을 해야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있는 지역, 학원가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후 확대 실시 제안함.		할 것으로 판단됨. -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및 다수 사업이 존재하기에 신중히 검토하겠음.	
10	**청년 주거문제 해소** **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다니고, 결혼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주거라 생각함. 이를 위해 적절한 해결책 마련 필요**	일자리노동청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2차 제안 중 15번 “청년들이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화 정책 등 마련” 과 중복 제안	
11	**음식물쓰레기 문제 해결** 일반주택의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따른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여전. 이에 따라 **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세외수입 고지서로 부과하여 납부**	환경보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됨에 따라 음식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계량방식, 개별계량방식, 칩(스티커)방식, 종량제봉투방식을 시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,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	
12	**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 해결** **충남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**라는 오명이 있는 만큼 고**령자의 운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우리도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, 75세 이상 버스(시내) 무료화(2019. 7. 1.시행) 추진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및 이동권을 확보하고 있음.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전면허증 반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고령자 교통 사망률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, 그에 따른 **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100원 행복택시 또는 다양한 방안 마련**		- 또한 2019. 9.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마련했으며,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모색 중임.	
13	**고령자 교통사고 예방** 고령자(보행자)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. 이는 운전자의 방어운전 미흡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교통질서 인식 부족으로 인함이라 생각함. 따라서 **고령자 관련 기관과 협조(노인정, 경로당, 대한노인회 등) 지속적 교통질서 교육 및 홍보 실시,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고령자 대상 방어운전 인식 교육 실시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우리도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,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중으로 기시행 중인 사항임 - 또한 대한노인회, 노인정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.	
14	**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교육 강화**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율도 높아지고 있음. 이에 **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운전면허증 자발적 반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병행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우리도 교통연수원 주관하여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중으로 기시행 중인 사항임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15	**고령화에 대비한 공동시설 건립**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자살률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고령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설치필요(고령자 공동생활이 가능한 임대아파트)**	노인복지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충청남도에서는 독거노인 자살예방과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돌봄+케어형 대규모 고령자복지주택(384세대/아파트형/노인공동주거시설)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3개 시·군(청양, 보령, 예산/650억)에 조성(2022년 완공 목표) 중에 있으며, -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충남형 독거노인 돌봄 선도모델 사업으로 소규모(3~10명) 공동생활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(매년 확대 추진) * 172개소 : 도비지원(57개소) / 시군 자체운영(115개소) * 인프라 구축비 지원(개소당 10,000천원) * 운영비 지원(공동취사 3,000천원 / 취사+숙박 5,100천원) - 앞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활성화 및 특정성별 영향평과와 공동생활홈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, 공동생활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인 독거노인보호 선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음. * 고령자 공동생활 임대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'공공실버주택' 사업이 있음.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사업유치가 필요함.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16	**청년지원 확대** 충남 지역에 대학이 많음에도 지역 대학 졸업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. 이를 위해 **우리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채용되어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**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. 또한 **지역별 커뮤니티센터 설치로 다양한 지원 및 정보 제공(일자리 정보 및 취업 교육 등)**	일자리노동청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지역대학 우수인재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가지 유형(현장실습형, 채용전제형)의 직무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- 충남·대전·세종 대학교 재학생, 도내 출자·출연기관,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매칭을 지원하며, 채용전제형의 경우 8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됨 - 8주간의 수습기간에는 시급 10,500원의 장학금을 지원, 정규직 채용 이후에는 기업 인건비 월 200만원×2년, 청년 인센티브 분기별 250만원×4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 - 우리 도에서는 구인·구직 등 일자리정보 제공 및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시·군별로도 일자리 및 취업정보센터, 고용복지+센터 등이 존재함	
17	**1년 이상의 일자리 지원사업 필요** 단기 일자리는 근로자들에게 만족감과 일에 대한 사명감을 떨어트림. 생산성 향상, **일에 대한 책임감 등을 통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필요**	일자리노동청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직접일자리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정부사업), 공공근로사업(시군사업)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최근 3년간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음 - 일자리사업 확대 및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해 사업 발굴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18	**청년 일자리 활성화**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심각함에 따라 충남이 자치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필요. 이를 위해 **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기업 활성화(창업 지원 및 창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)**	일자리노동청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2차 제안 중 15번 “청년들이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화 정책 등 마련” 과 중복 제안	
19	**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는 충남**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. 이는 젊은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(교통, 교육, 생활환경(병원 등)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).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**청년농촌연구인 양성과 산업단지(6차산업 기반) 유치로 일자리(충남지역 인재 우선 채용)를 만들고, BIS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**할 수 있도록 하며, **위급(유사시) 시 이용(출산가능한 산부인과 및 조리원 등 필수)할 수 있는 대형병원**	농촌활력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산업단지 유치는 농촌활력과 소관이 아니고, 산업단지 내 6차산업기반 조성 지원 불가 ※사유 : 6차산업 제조·가공시설 지원은 1년이상 해당분야 영업실적이 있어야 공모 가능	
	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제안 5번 답변으로 대체	
	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▸ 민선 7기 공약,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중 ↳ 도 자체용역 추진 : 임신출산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용역(2019년 3~9월) ○ **(용역결과)** 취약지 200여명 임신·출산부 대상 분석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유치, 사교육 버금가는 공교육시스템 구축 및 강화		- 임산부 33%는 거주지 외 산부인과 이동, 이 중 7.9% 타 시도 이용 -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 적극 활용 의견(61.5%) ⇨ 충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역점시책으로 제안 ○ **(조치계획)** 건립방안 마련 방침(재정부담 및 설치운영, 규모 기준) - 공모를 통한 대상 시·군 선정 추진 ※ 시군 대상, 지방정부회의 및 부단체장 회의 등 지속 안내	
20	**장애인 일자리 확보** 장애인들의 경우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. 물론 지원금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**장애 유형별로 가능한 일자리(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)를 만들어 보급 필요**	일자리노동청년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우리 과는 '20년 본예산에 60,000천원을 계상하여,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금 명목으로 1기업당 10,000천원씩 총 6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 - 본 사업을 시작으로, 여러 장애인 유관기관 방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장애 유형(시각, 뇌병변 등) 및 정도(경증, 중증)별로 장애인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검토하겠음	
21	**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를 고령화에 따른 복지로 활용**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	에너지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현재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)는 『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』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**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수를 인근 마을(특히 고령자 대상의 복지) 및 목적사업에 맞게 적극 활용**		제4조에 의거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-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, 방재,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- 또한, 「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"전력산업기반기금"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할 수 있어 -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지원할 시 중복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-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**인근 마을의 고령자 대상의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**	
22	**의료공백 문제 해결** 지역 병원의 경우 환자 대비 의료진이 부족하여 대기 시간도 길고 진료받기 힘듦.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병원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환자 이송이 어려움. 이를 위해 **지역병원 의료진 충원 및 대학병원과의 연계 방안 등 검토 요청**	보건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**충남도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인력 파견 협진 시행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** ❶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추진 **(의사인력)** 대학병원 의료인력 파견지원 및 진료 협력 ▸ 충남대병원: '14년부터 16명, 서울대병원 5명(서산의료원) ▸ 공중보건의 배치 391명(보건기관 370, 공공·민간병원 21) **(간호인력)** 단국대병원 →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파견 2명 ※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추진중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		❷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의료체계 강화 **(응급의료기관)** 16개소(권역센터 1, 지역센터 7, 지역기관 8) - 응급의료기관 '20년 42억원 지원(공공·민간 10개소) **(닥터헬기운영)** '16.1월부터 단국대병원 배치, 도내 전지역 운항 - 1,165명 이송(19.10까지) 및 골든타임 확보(평균 46분)	
23	**저출산 극복**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. 이러한 심각한 문제 해결(아기 낳기 좋은 충남 실현)을 위해 **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설치 운영 또한 아기 보육에 필요한 아기수당 확대 지급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(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설치) 국정과제 '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%' 와 연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리모델링 전환사업 등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음('18년 99개소→'19년 123개소) -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, 지원 기간 확대(만12개월 이하 → 36개월 미만)	
24	**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 방안**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**어린이집(영유아) 무상교육 실현과 고령화(독거노인) 대비 생활형 실버타운 건설 제안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(어린이집 무상교육 실현) '19년부터 정부지원금 외 부모부담금(차액보육료) 68,260~91,600원을 전액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※ 원칙 :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은 정부 부담, 부모 및 영유아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부모 부담	
		노인복지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제안 15번 답변으로 대체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25	**무상보육 실현** 저출산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. 수요자인 부모의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**학교와 같이 공보육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화를 없애고 국가(또는 충남도) 차원의 무상교육 및 무상 보육 실현 정책 마련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(어린이집 관련)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리부처가 이원화 되어있으며, 모든 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 일원화, 적정비용(표준보육비용) 지원 제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음 ※ 만0~2세 : 어린이집 이용 / 만3~5세 : 어린이집, 유치원 모두 이용 가능	
26	**만 3, 4세의 보육료 현실화** 양질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**만 3, 4세의 표준보육료도 고시하고 지원 필요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우선 2020년 만5세에 대해서 표준보육비용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외 부모부담금(차액보육료)을 전액 지원 계획예정이며, - 향후 만3~4세에 대해서는 도·시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	장기검토 필요
27	**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 확보** 영유아를 위한 보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**탄력적인 출, 퇴근시간(1시간 늦게, 1시간 빨리) 제도화 및 재택근무 활성화**, 또한 **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하여 직장 내에서도 언제든지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퇴근 아이키움시간 시행 (16개 기관 127명 활용) - 충청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(정원 223명, 19년 64명 증원) - 도내 직장어린이집 운영(51개소, 19년 1개소 증)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28	**아이 많이 낳는 충남 실현** 출산율이 극복을 위해 **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(불임, 난임으로 인한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 등 해결,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) 필요**	출산보육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양방) ▸ 예 산 액 : 1,513,800천원(국비 756,900, 도비 302,760, 시군비 454,140) ▸ 대 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,차상위 계층 등 ▸ 사업내용 : 인공수정,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※ (2019년) 횟수확대(최대 7회), 사실혼부부까지 지원 -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▸ 예 산 액 : 367,000천원(도비 110,000, 시군비 257,000) ▸ 사업대상 :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▸ 사업내용 : 난임 여성에게 침, 뜸, 한약 등 최대 150만원 지원	
29	**미세먼지 줄이기**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**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발전소 건립 필요**	에너지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올해 추진 중인「1차년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」 및 내년도 추진 예정인「2차년도 연구 용역」을 통해 ‘주민 주도형 대안 발전모델’ 마련할 예정임	
30	**당진지역 화력발전소 운영 축소** 충남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오염이 전국에서 최악인 원인이 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로 때문이라 생각함. 날이 갈수록	기후환경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미세먼지 계절관리제(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) 시행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출력 상한제약 시행 중에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**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 점차 축소 운영 필요**			
31	**생활환경 대응** 충남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임. 이에 수시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노약자들의 돌봄이 필요함. 특히 **저소득층 노약자에 대한 지원(황사마스크 등)이 이루어져야 하며, 무엇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고, Co2 배출 줄이기 운동(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) 실시**	기후환경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- 기후환경 등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 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2020년에는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, 이와 함께 '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' 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임 - 현재 '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' 사업을 통해 가정, 상가, 학교 등 방문 컨설팅(에너지 절감 방법, 탄소포인트제 제도 소개 및 가입권유 등)을 진행하고 있으며, 2020년에는 올해보다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임	
32	**노변 생활쓰레기 투기 근절 방안** 시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심코 음료병(캔), 비닐봉지 등을 노변이나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. 이를 위해 **지역민 인성교육 강화, 휴지통 설치는 최소화하되 설치**	환경보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쓰레기 배출억제 정책에 따라 단순 쓰레기통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거점형 분리수거함(클린하우스)을 2019년 114개 지원하였고 시군자체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및 CCTV 설치하고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시 일반적 휴지통이 아닌 디자인 휴지통 설치(Nudge 효과 – 쓰레기를 투기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),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및 CCTV 설치			
33	**오늘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 물품은 몇 개나 될까요?**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. 매일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 개수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캠페인 실시. 또한 리빙랩과 같이 주민주도형 실험적 사업 공모지원 운영	환경보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기시행 -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대책 수립('19.11), 충남도청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다짐 선포식('19.11) 및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('19.10)를 개정하고 1회용품 ZERO 충청남도 만들기 정책제안 워크숍 개최('19.11) - 1회용품 사용근절 도민홍보를 위한 신문광고('19.11)를 실시하였으며,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음	
34	**농촌생활쓰레기 분리배출** 여전히 농촌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여 여러 가지 문제(환경오염, 화재 등) 발생.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 계도 활동 실시	환경보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기시행 - 쓰레기 배출억제 정책에 따라 단순 쓰레기통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거점형 분리수거함(클린하우스)을 2019년 114개 지원하였고 시군자체로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및 CCTV 설치하고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35	**스마트 인공지능 쓰레기통 설치 확대** **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음**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스마트 인공지능 쓰레기통을 도차원에서 설치**해야 함.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, **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참여를 확대**해야 함. (사례보기 ▼) http://www.cntoday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6841	환경보전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쓰레기 배출억제 정책에 따라 단순 쓰레기통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거점형 분리수거함(클린하우스)을 2019년 114개 지원하였고 시군자체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및 CCTV 설치하고 있음	
36	**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** 도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 등 예산이 편성되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**군 단위로 갈수록 여전히 위험한 환경(노후화된 건물, 특히 방치된 시설물 등)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. 이를 위해 환경개선사업 필요**.	건축도시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**"도시재생뉴딜사업"** 추진 중 ·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, 노후건물 증가 등 쇠퇴하는 도시(농어촌 포함)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 · 2019년 현재 9개 시·군 12개 지역(총사업비 14,407억원)에서 사업추진 및 준비 중에 있음. - **"농어촌 주택개량사업"** 추진 중 · 농어촌 지역의 노후·불량 주택 개량에 저리 융자금 지원 · 2001~2019년 현재 19,815동(융자8,722억원) 개량 - **"농어촌 빈집정비사업"** 추진 중 · 농어촌 빈집 철거비용 지원(동당 2백만원) · 2001~2019년 현재 14,636동(사업비 292억원) 철거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		- **“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”** 추진 중 ·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(분쟁조정), 철거, 안전조치를 통한 환경개선 및 사고예방 · 총 56개소 중 17개소 정비 완료, 39개소 현재 국토부, 도, 시·군, LH 정비방법, 사업비 확보방안 등 협의 중 - **“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공모사업”** 추진 중 · 농어촌 지역, 노후화 구도심,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발생 우려 및 경관개선 필요 마을 환경개선 · 2009~2019년 현재 63개 마을(총사업비 228억원) 환경개선 완료	
37	**가축의 악취문제** 충남이 축산 1번지로써 가축을 많이 사육하나 악취 문제가 심각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대규모축산 단지 형성 필요. 대규모화와 시설화로 해결**해야 함.	축산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지자체의 신규 축산업 규제강화 및 지역민 반대 등으로 타 부지확보 불가능 - 대규모 축산의 집단화에 따른 가축질병 차단의 한계로 질병 발생시 막대한 피해 우려 -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·운영시 더 많은 악취문제 발생 예상	
38	**공동주택 물 절약을 위한 홍보**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임에 따라 **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제외하고 단수할 수 있도록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**	물관리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충청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시·군과 공동으로 물 소비량이 많은 공동주택(아파트 등)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보급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, 가뭄을 대비하여 시군별로 물 절약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-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 절약을 위해 단수 후 물을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		재공급할 경우 수압의 변화로 인해 관로의 이물질 등이 발생하여 절약하는 물의 양보다 탁수를 제거하기 위해 이토하는 물이 많으므로 단수는 불가함.	
39	**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** 지역별로 쉼터 및 휴식 공간으로 예쁘게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**공원에 대한 관리를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'1인책임제도'를 도입,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** – 1인 실명제로 책임자 지정 실명간판 설치 – 지정 자원봉사자에 봉사시간 및 일정 수당지급 – 일정 시간 관리 예) 하루 4시간, 아침·저녁 나누어 점검 – 책임감 고취를 위해 유니폼 지급 ⇨ 내손으로 내 고장을 지키고 가꾼다는 애향심 고취	건설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도시공원에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내 고장 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. - 다만,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시군 고유사무로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운영필요. - 또한 자원봉사의 취지를 고려, 수당지급보다는 시간·노력도 대비 소득공제 등 다른 수단을 통한 보존방안 검토필요.	
40	**도청 문예회관 연간 일정 공개 및 홍보**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건립된 도청 문예회관의 다양한 행사	문화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도청 문예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행사의 전체일정 및 공연예매는 도청문예회관, 충남문화재단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및 공연 등의 혜택을 일부 사람들만 받고 있음. 이에 **도청 문예회관 연간 공연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(시·군 등에)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의 질적 향상 도모**		홈페이지에서 공개 중 - 또한, 홈페이지에서 공연안내 문자 수신을 신청하면 매월 다양한 공연 소식을 안내 받을 수 있음	
41	**충남도만의 관광콘테츠 개발** 시대에 발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함. 미흡한 **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충남 관광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**	관광진흥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시·군에서 제작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관한 관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『공주시 문화관광앱』, 『공주 AR관광 앱』, 『공주랑 앱』, 『부여여행 앱』 등 이미 존재하고 도에서 출자하여 만든 백제세계 유산센터에서도 『디지털로 체험하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』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음. - 문화재청 등에서 만든 앱까지 포함하면 최소 5개 이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운영·관리중에 있으며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관광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판단됨	
42	**관광명소 적극적 발굴 및 홍보** **충남의 관광명소들을 적극 발굴**하고 **특성별(역사여행, 맛집여행 등), 기간별(1박2일, 2박3일 등), 장소별(바다, 산등)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 실시**	관광진흥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여러 여행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기간별 여행상품 개발 - 우리 도 관광특성을 살린 역사문화투어, 서해갯벌투어, 온천체험, 병영체험 등 등 다양한 테마상품 발굴 추진 - 연중 개최되는 전국규모 행사 참여 홍보전 추진, 내나라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		여행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충남관광상품 홍보 추진 중	
43	**계룡산 케이블카 설치** 충남의 명산인 계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지만 고령자, 장애인 및 어린이들과 같은 약자들이 등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약자들도 명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**를 제안함	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의견은 오래 전부터 찬·반의 대립이 팽팽함. 따라서 케이블카 문제는 관련 지자체, 시민단체, 지역주민 등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. -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·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, 국가와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관광·휴양지로서의 가치보다 선행됨. -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과 자연훼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될 계획임. -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,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.	
44	**서산시의 중지된 테마파크 조성사업 충남도가 적극 검토** 시유지, 국유지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은	관광진흥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서산시에서 고북면 테마파크 조성사업(15년 이전) 추진하였으나 테마파크의 사업성으로 인한 개발부진. - 2015년도 서산시에서 수행한『고북면 사기·정자지구 개발 프로젝트』용역 결과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성 확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필요하다고 생각함.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약속된 사업(서산 고북면 정자사기지구 테마파크 조성사업)이 **시장이 바뀌면서 중지된 부분에 대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산시와 협력적 관계에서 적극 검토** 요청		보가 어려워 15년 파머스 가든 개발사업으로 전환 하였으나 - 입지여건(공군부대 근처) 등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올해 초 사업 일몰. ⇒ 민간투자 및 사업성 확보 없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	
45	**6차 사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** **공단 조성 부지**가 비어 흉물이 되는 곳이 많음. 이런 **유휴 공간을 방치가 아닌 충남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파크 등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사업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**	관광진흥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유휴지를 활용한 테마파크, 관광단지 개발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사업추진 불가	
46	**학교 앞 속도 방지턱 적절한 설치** **학교 앞 속도 방지턱**은 학생들의 등·하교 안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. 그러나 너무 많은 설치, 표준화(높이 등)되지 않은 설치로 운전 중 사고발생의 우려도 있음. 따라서 **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의 설치와, 규격에 맞게 표준화된 높이를 낮추어 설치 필요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 적용하여 설치 중으로 기시행 중인 사항임 -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과속방지턱 편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폭 6m 이상일 경우, 설치길이 3.6m, 설치높이 10cm의 규격을 적용하고,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로의 경우, 설치 높이 7.5cm를 적용하여 설치하며, 원호형 또는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고 있음.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		- 또한 도로관리청에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사업 준공 전 관할 경찰서 협의 후 적합하게 설치하게 됨. - 제안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높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은 승차불쾌감, 차량 파손우려 등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시·군(도로관리청 포함)에서 즉시 조치해야할 사항임. - 다만 표준화된 규격으로 설치 운영함에도 발생되는 과속방지턱 민원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/h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그러하지 않고 급격하게 제동함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.	
47	**학교 앞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** **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차량 속도 제한(30km)**이 하교 이후 및 야간에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정체되는 현상이 있고,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 따라서 **하교 후 및 야간에는 일반도로(60km)로 지정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** 필요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기사항은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소관으로 판단됨 - (참고)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속도 제한 등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	
48	**점멸 신호등 변경** 교외에서 잦은 정차로 인한 에너지낭비와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교통량이 적은 교외 지역의 점멸등 운영은 기시행 중인 사항으로 신호등 운영체계 관리는 관한 경찰서 소관임.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사고발생이 잦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교통량이 적은 교외에서는 신호등을 점멸 신호등으로 변경이 필요함**.			
49	**도로 및 하천다리 미화** **도로 및 하천다리**가 시멘트 구조물로써 무미건조하여 미관상 좋지 않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**환경 미화 작업이나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여유를 확보**해야 함.	도로철도항공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교량에 대한 환경미화는 다수의 보행환경이 조성된 도심지 교량이 대상으로 판단됨 - 충청남도 관리 지방도는 대형자동차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임 - 교량에 대한 환경미화 작업은 관련 시군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각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함	
50	**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운동전개** **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**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 80프로 이상 필요, 그 외 **도민참여 자정결의 및 캠페인 등 전개필요**.	건설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▶ 기간 : 19. 3. 25. ~ 10. 31. ▶ 충남도민,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자발적 참여 ▶ 서명인원 : 1,010,961명	
51	**내포신도시 혁신도시선정** **내포신도신 혁신도시선정**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**서명운동**	건설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▶ 기간 : 19. 3. 25. ~ 10. 31. ▶ 충남도민,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자발적 참여 ▶ 서명인원 : 1,010,961명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80프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함. 1. 서명운동 80% 달성 2. 마을주민 증가는 마을 리더와 주민들이 노력해야 함			
52	**출산률 저하로 인한 젊은세대 유입 필요** 젊은이들이 충남에 정착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함. 이를 위해 **혁신도시 유치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인재를 우선선발**하고, **교통·병원 등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성 제공**	건설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혁신도시법 개정 공포 ▶ 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및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※ 지역 대학 졸업생 취업기회 확대(2개 기관→51개 기관) - 충남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▶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(11. 28.)	
53	**정책서포터즈 명칭 변경** **외국어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명칭(범도민 정책제안 활동가? 등)으로 변경**	정책기획관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2007년부터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전화설문(ARS)으로 도민의 의견을 실시간 수렴하고자 ‘정책서포터즈’ 운영 중 ※ 제6기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: ‘19. 9. 18. ~ ‘21. 9. 17. -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,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명칭 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- 서포터즈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추후 2021년 제7기 모집 시 ‘범도민 정책서포터즈’ 명칭 우리말로 순화를 검토하겠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54	**마을 공영 주차시설 확대**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**노상 불법 주차가 증가**하여 이로 인한 **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 정체의 문제**로까지 이어짐. **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공영 주차공간(무료 이용 또는 소액 이용료) 조성 필요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·도비보조사업으로 기시행 중인 사항임	
55	**종교단체 주차시설 활용으로 주차난 해결** 지역별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시민들 불편은 물론 특히 **야간에 불법 주차로 인해 위급시 긴급을 다투는 시간을 허비**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지역 내 종교시설의 주차장이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**	교통정책과	○ 채택 / **부분채택** / 미채택 / 기시행 - 주차장법 제8조 및 13조에 따라 주차장 운영·관리는 시군사무임 - (기시행 8)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금산군, 서천군 - (부분채택 4) 천안시, 부여군, 태안군, 예산군 ※ 향후 종교시설 무료 개방 추진 예정 - (미채택 2) 홍성군, 청양군 ※ 사유: 종교단체 반대, 시설파손 및 도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, 장기방치 차량 발생 등	
56	**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해소 방안** **이주민(귀농, 귀촌)과 원주민 간의 이**	역량개발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지역민와 귀농귀촌인과의 이해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**마을 반상회 등을 통한 시민교육 등 강좌 지원**으로 화합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한 충남 건설(**단순 귀농, 귀촌 교육이 아닌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**)		①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(10개시군) •마을환경개선, 주민화합프로그램운영 등 ②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(3개시군 30개마을) •갈등관리 현장방문교육, 체험봉사활동 등	
57	**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원**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 부진으로 인한 학습효과 및 자존감과 교우관계 저하로 인한 소외감 심각. 이를 위해 **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경비 지원 정책 마련**	여성가족정책관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정도 평가 후 어휘구분 발달촉진, 대화·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-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으로 가족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을 조성(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)하고 있음 - 문화자녀의 언어발달·수학교육 등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위해 다문화어울림 사업으로 다문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	
58	**노후된 장항선 열차 교체** **장항선 열차의 노후화로** 열차를 이용하는 **이용객들의 안전에 빨간불**이 켜졌고,	도로철도항공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장항선 열차운행은 한국철도공사(KORAIL)에서 관리 중이며 운행 중인 열차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과 관광객의 이미지 개선을 요청사항에 대하여,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무엇보다 장항선을 이용해 **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첫인상**을 남길 수 있음. 장**항선 열차의 순차적인 교체가 시급**함		- 한국철도공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장항선 노후열차의 개선방안을 요구할 계획임. - 아울러,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노후 디젤열차에서 신규 전철(EMU)로 전면 교체될 계획임	
59	**주민반상회 부활** **마을 주민 간, 공무원과 주민 간, 지방의원과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**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 마을 시설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주민 반상회를 실시**해야 함	자치행정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**미채택** / 기시행 - **(필요성)**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 - **(실효성)**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대면 반상회의 실효성 낮음 ▸ 도시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, 생활패턴이 다양화 되었고,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참석률 저조 ▸ 과거보다 반장 업무 축소, 대다수가 생업 외 봉사의 개념으로 활동 ▸ 다양한 SNS, 도·시·군 홈페이지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- **(대안)** 관 주도의 하향적 의사 전달 및 중앙 정책 홍보를 위한 기존 반상회를 대체할 다양한 소통 창구 존재 ▸ 주민총회, 입주자 대표회의, 부녀회 등 주민 모임 형태 다양화 ▸ 매달 시·군정 소식지, SNS, 각종 주민 회의에 활용할 시책 홍보 자료('반상회 홍보자료')를 전달하여 주민에게 정책 안내 중 → 다양한 주민 모임 시 정부 정책 등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'반상회 홍보자료'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·군에 안내 **※ 별도의 '대면 반상회 부활' 제안은 미채택**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60	**길에서의 흡연 제한** 길에서 담배를 피워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음. 이를 해결하기 위해 **길거리 흡연을 막아야 함**	건강증진식품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▸ 현재 15시군 조례로 금연구역 6,232개소를 지정·운영 ▸ 주로 거리, 도시공원, 놀이터, 버스정류장, 해수욕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 단속반이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3~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※ 단속인력 : 234명(공무원 78, 금연지도원 73, 경찰 10, 민간단체 61명 등) ※ 7,183건 점검, 과태료 100건, 5백만원 부과 - 금연에 대한 인식변화 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중고, 대학·산업체 교육·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무분별한 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실 36개 설치·운영과 함께 흡연자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음 ⇨ **금연환경 조성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단계적 확대할 예정임**	
61	**충남도내 금연아파트 지정**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도민들의	건강증진식품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면 금	

연번	제안내용	소관부서	검토내용	비 고
	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**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, 도지사가 직접 '금연아파트' 명패를 부착, 대대적 홍보로 충남 전역으로 확대 결과적으로 금연도시로 조성**		연구역안내표지(지정)를 설치할 수 있음 ▸ 현재 도내 금연아파트 39개를 지정·운영하고 금연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있음 ※ 적발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, 점검169건 주의·지도 4건 - 또한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과 직·간접 흡연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금연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음 ⇨ **아울러, 금연환경 조성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단계적 확대할 예정임**	
62	**장애인 택시 이용 편의성 재고** 장애인 콜택시가 각 시·군별 운영에서 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됨. 변경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함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로 연결하는 방법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시군의 지리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야 함	장애인복지과	○ 채택 / 부분채택 / 미채택 / **기시행** - 천안, 아산은 기존 상담원이 고용승계하여 광역이동지 센터에서 근무중임 - 나머지 지역은 전담 조를 편성하여 운영중이며, 추가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음	